정세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

1. YS개혁의 성격과 전망

1) 개혁의 객관적 조건

- ㅇ 국제적 조건
  - 양극체제 붕괴로 인한 전세계적 탈권위주의화
- ㅇ 국내적 조건
  -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
  - 김영삼정권의 정통성 확보
  - 김영삼정권의 지배세력내 기반의 취약성

2) 두가지의 견해

- ㅇ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의 발전
  - 군부파시즘과 구별되는 부르조아민주주의 정권의 한국적 형태
  - 개혁수위는 신구지배세력의 세력다툼 속에서 결정될 것
  - 지배권력의 안정화가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이 크다.
- ㅇ 민간파시즘으로의 전환
  - 김영삼 정권의 계급적 본질은 독점자본가
    —> 독점자본가의 이해를 일차적으로 대변
  - 기존 정권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.
  - 현재의 일련의 개혁 조치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 취하는 일과성 조치
  - 개혁은 지배세력 내부의 세력 재편으로 귀결되는데 그치고 민간파시즘으로 전환

3) 전망

- ㅇ 개혁의 목표와 방법
  - 지배세력내 세력 재편과 경제회복을 통한 지배질서의 안정화
    : 재산공개와 부정부패 척결
    : 신경제 5개년계획과 행정규제완화
    : 재야 영입을 통한 운동권의 체제내화
  - 언론을 통한 여론정치

ㅇ 개혁의 한계

- 한계의 근원

: 개혁에 관한 철학과 청사진의 부재

: 계급적 기반의 한계

- 사회, 정치분야 등에서 절차적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는 예상되나 경제분야,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소유구조 개혁, 금융실명제등 계급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선 한계가 드러날 것임

ㅇ **전망**

- **개혁의 한계가 일순간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임.**
- **신3저현상 등 경기회복의 조건이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향후 2년여 동안은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잡을 것임**
- **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개혁의 한계에 관한 시비가 예상됨**

2. 경제개혁의 내용과 전망

1) 경제개혁의 내용

ㅇ 92년 경제성장률 : 4.7% (2,945억불)

ㅇ 93년 목표 : 7 ~ 8%

ㅇ 주요정책

- 금리인하 (2차) : 5조원의 금융비용 경감
- 5백인 이상 사업장 임금억제 : 92. 93년 2년간 2조원의 임금비용 절감
- 설비투자자금 확대 : 연초계획보다 5천 7백억 추가

—> 9조 7천 4백억원으로 확대

- 행정규제 완화
- 통화공급 확대

ㅇ 비효율적 산업구조인 독점적 재벌경제를 지속시키는 정책

2) 개혁의 관건 : 경제회복과 물가안정

ㅇ 물가불안 요인

- 수출호조 —> 수지적자 완화 —> 외화의유입

- 통화 팽창 : 4월 중 17.8% 기록, 1/4분기 보다 1%포인트 증가

(관리목표 : 15 ~ 19%)

==> 내수의 과열로 인한 과소비

* M^2증가율

90	91	92	93.1/4	93.4
21.4	18.6	18.4	16.8	17.8

* 5월 기준 : 1년동안 18.7% 증가

○ 물가상승, 고통분담론의 약화와 임금인상투쟁의 빈발 가능성

- '무노동 부분임금제'의 좌절
- 현대정공 파업

* 물가동향 (전년말 대비 , %)

	92.4	92.12	93.4	93.5
소비자	3.0	4.5	3.3	4.3
생산자	1.1	1.6	1.3	

○ 신3저현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출은 수출은 회복세이나 설비투자율은 정체

* 수출증가율 (전년 동기 대비)

92.1/4	2/4	3/4	4/4	93.1/4
11.4	5.9	12.8	- 1.2	12.1

* 설비투자 증가율(%)

92.1/4	2/4	3/4	4/4	93.1/4
8.5	4.5	- 3.1	-10.2	- 10.1

3) 올바른 경제개혁의 방향

○ 금융실명제의 실시 : "신경제 5개년 계획 세제부문 개혁방안" (재무부, 5월 26일)

- 95년에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여 이자,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함.
- 실명제에 관한한 거론은 전혀 없음
- 경기회복을 빌미로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

○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 소유분산

ㅇ 세제개혁

-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완화 조치 필요

;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한계세율은 40%에 육박

; 영국 25%

; 미국 15%

3. 신국제 질서와 남북통일

1) 국제질서

ㅇ 냉전구조의 와해

- 전세계적 단일 시장경제화
- 각국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정치 사회질서의 와해

ㅇ 국제경제의 블록화 민족주의의 강화

- EC, NAFTA,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블럭 정제화
- 국가간 민족주주의, 보호주의의 증대
- GATT 또는 미국의 쌍무협상을 통한 통상압력의 강화

ㅇ 동북아에 있어 일. 중의 패권다툼 강화

-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

* 연간경제 성장률 : 2,000년까지 연 평균 6%성장률 목표

(80년대 평균: 9%, 한국 6.8%)

* GNP : 1조 9,580억원(단위 : 중국화폐)

* 무역규모 : 수출 719억불

수입 630억불

〈 참고 〉

ㅇ 한. 일 상호간의 무역비중

- 일본의 전체 수출 중 한국의 비중 : 6.2 % (3,145억 중 195억)

수입 : 4.9 % (2,367억 중 116억불)

-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일본의 비중 : 22. 4%

수입 15. 1 %

2) 남북 관계

ㅇ 북측의 태도변화

- 남북대화의 중단 : 팀스피리트 훈련
- NPT 탈퇴
- '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' (4월 7일)
- 남북정상회담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차관급 특사교환 제의

==> 김영삼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적극적 교류의지 표명

ㅇ 북한의 경제현실

- 식량과 석유(연료)의 절대 부족, 무기수출 감소
- 현재 중국으로 부터 식량과 석유를 도입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화결재 불능으로 어려움에 봉착

ㅇ 남한의 입장

- 김영삼의 '신외교'와 임기내 '국가연합' 실현 선언

4. 사회운동의 전망

ㅇ 객관적 조건

- 이데올로기의 상실 --> 대안부재
- 패배주의의 만연
- 활동가 조직의 전면적 해체 상태
- 명분과 도덕적 권위의 상실
- 시민운동의 약진

ㅇ 두가지의 경향성

- 대중조직 강화론 : 정치투쟁의 지양
- 정치적 국민운동체론

ㅇ 전망

- 사회운동의 다원화 : 소비자운동, 환경운동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성장
- 재야단체운동의 쇠퇴

--> 제도정치권으로의 편입

- 2,3년후 고통분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제투쟁이 활성화 될 것임

5. 시기별 현안과 대응방안

1) 개혁 정국 (현재 ~ 94년)

- ㅇ 김 영삼 취임 ~ 보궐선거
- ㅇ 청와대의 정국주도와 민주당의 침체기
- ㅇ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한 탐색기
- ㅇ 주요사업
  - 신시대 정치이념과 개혁정책의 체계화
  -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조직과 인물의 조사
  - 당내 개혁세력의 정비
  - 지방의회, 단체장 선거의 준비 : 후보자 물색과 선거전략 수립

2) 지방자치 선거 정국 (94년말 ~ 95년 중반)

- ㅇ 지방의회. 단체장 선거, 민주당 전당대회
- ㅇ YS개혁의 한계노출, 그러나 일정한 경기회복으로 정권은 안정상태
- ㅇ 민주당의 세력재편기
- ㅇ 주요 사업
  - 지방의회, 단체장 선거 승리
  -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리더쉽 창출
  - 개혁 프로그램 제시와 개혁의 주도권 장악

3) 총선 정국 (95년 말 ~ 96년 중반)

- ㅇ 정치권 세력 재편기
- ㅇ 총선 전 또는 총선결과에 따라 대선거구제, 내각제 개헌론 대두 가능성
  - 대선거구제,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야당분열 가능성
  - 개혁 세력내 사전입장 정리 필요
- ㅇ 총선결과에 따라 DJ 복귀론의 대두 가능
- ㅇ 총선결과에 따라 야당 분열, 신당창당 움직임 대두 가능성
- ㅇ 주요사업
  - 총선 준비와 선거 승리
  - 내각제 개헌 저지

- 신당창당에 대한 대처

4) 대통령선거 정국 (96년 중반 ~ 97년 말)

ㅇ 권력 교체를 위한 전면전 시기

ㅇ 주요사업

- 대선 준비